

데스크 칼럼

양동민

정치부장



‘무신불립’(無信不立). 신뢰가 없으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공자의 말이다. 공자는 논어의 안연편에서 제자 자공과의 대화에서 자공이 정치의 본질에 관해서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족식·足食), 군대를 충축하게 하고(족병·足兵),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다(민신·民信).” 자공은 이어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군대를 포기해야 한다고 답하고, 계속해서 자공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묻자, 공자는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며 “자고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백성의 믿음을 잃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라고 설파했다.

2500여 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그 의미는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권위는 강제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지방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더라도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1995년 부활한 이후 올해로 31년

기고

정성욱

목포농협 농해지점장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먼저 새로운 특별시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광주와 전남이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힘을 모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나아가 지역의 생존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도전이다. 사실 광주와 전남은 오랫동안 하나의 생활권이자 운명공동체였다.

전남도청이 광주에 자리하던 시절, 행정과 경제, 교육과 문화의 중심은 광주였고, 전남은 그 기반을 이루며 함께 성장해 왔다. 전남의 농민들은 광주의 시장에서 밭의 결실을 나눴고, 전남의 청년들은 광주에서 배우고 꿈을 키웠다. 광주의 발전은 곧 전남의 발전이었고, 전남의 성장은 광주의 성장과 맞닿아 있었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행정적으로는 분리됐지만 사람들의 삶과 정서까지 나뉘지는 않았다. 특히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 속에서 광주와 전남은 함께 울고 함께 싸우며 역사를 만들어 왔다. 광주의 아픔은 전남의 아픔이었고, 전남의 희망은 광주의 희망이었다. 그렇게 40여년의 시간을 지나 광주와 전남은 다시 하나의 미래를 설계하게 됐다.

그러나 통합의 성공을 자축하기에 앞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다. 바로 전남이 오랜 세월 지켜온 농도의 정체성이다.

취재수첩

메가특구 성공, 결국 제도에 달렸다

이현규

정치부부장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발포했을 때 관심은 단연 ‘800조원’이라는 숫자에 쏠렸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인공지능과 에너지·소재 산업을 연결해 새로운 국가 첨단산업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지역의 미래를 바꿀 만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것과 실제 기업

째를 맞았다. 민선 9기 출범 한 달을 맞은 지금, 특히 광주와 전남이 40년 만에 단일 광역정부로 다시 출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가장 중요하게 새겨야 할 덕목이 아닐까 싶다.

가정의 가장도 가족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공적 영역은 더욱 그렇다.

지난달 1일 통합특별시 출범 후 한 달, 통합정부가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라는 대형 성장동력을 확보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출범 초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반도체 산업 기반 확보다. 정부는 지난 6월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군공항 중전부지에 반도체 팹 4기를 건설하는 800조원대 서남권 반도체 투자계획을 공식화했다. 반도체 팹이 들어설 입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확정됐다.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도 잇따라 군공항 부지를 찾아 투자 일정과 행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실제 투자 단계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250만평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확정했다. 정부 발표후 한달, 말 그대로 속전속결이다.

군공항 이전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부지가 국가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출범과 동시에 미래 성장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에 대한 경계도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침묵을 동의나 신뢰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남광주의 미래를 담보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앞에서

기초자치단체이든 개인이든 자신의 생각을 쉽게 드러내기 어려울 뿐, 이해관계가 얽힐 경우 내부 불만은 결국 외부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필요한 인프라인 부지나 용수, 전력망 확보 과정에서 언제든 지 발생할 수 있다.

통합 과정에서 내재돼 있던 행정조직 통합에 따른 갈등 표면화도 한가지 사례다.

통합특별시는 당초 8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청사별 기능을 재조정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광주청사에는 기관 운영과 정부 분야를, 무안청사에는 생활행정과 안전·농해수산 분야를, 동부청사에는 산업·경제 분야를 각각 배치하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기획과 예산, 인사 등 시정 운영의 중심 부서가 특정 청사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통합 과정에서 제시된 기존 근무지 존중 원칙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했다.

조직개편이 늦어지자 후속 인사도 함께 멈춰 섰다. 부서의 위치와 기능이 확정되지 않아 간부 인사와 실무진 재배치가 어려워졌고, 공무원들은 앞으로 맡을 업무와 근무 청사를 알지 못한 채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320만 시민의 생활권을 하나의 광역행정체제로 묶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민과 공직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산업을 유치하고,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결국 민선 9기, 통합특별시의 성공 여부는 결국 ‘무신불립’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농도의 가치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과 첨단산업의 메카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 교육과 연구 역량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하지만 통합특별시의 경쟁력이 도시의 성장동력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다. 전남의 농업과 농촌 역시 특별시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핵심 축이기 때문이다.

전남은 대한민국 최대의 농업생산지이다. 넓은 들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땀방울은 국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반상은 결코 저절로 차려지지 않는다. 새벽 어둠을 뚫고 논과 밭으로 향하는 농업인의 발걸음, 폭염과 한파, 태풍과 가뭄을 견디며 생명을 길러낸 송고한 희생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산업이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다. 첨단 기술과 에너지는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식량을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는 나라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 식량안보는 곧 국가안보이며, 농업은 국가 존립의 근간이다.

농업이 지닌 가치는 경제적 생산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농촌은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국토의 균형을 유지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홍수와 가뭄을 완화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도 수행한다. 농업이 무너지면 단순히 농촌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국가의 지속가능성마저 흔들리게 된다. 이 때문에 통합특별시의 출범을 바라보는 농업인들의 마음에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존재한다. 도시 중심의 정책과 예산 배분 속에서 농업과 농촌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다.

이에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의 첫 시정에 몇 가

지를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한다.

첫째, 특별시의 미래 비전 속에 농업을 핵심 가치로 담아야 한다. 농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업·농촌 특별발전계획을 수립해 통합 이후에도 농업 분야의 투자와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청년농 육성정책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희망을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와 주거, 창업과 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젊은 피가 도는 농촌만이 지속가능하며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한다. 의료와 복지, 문화와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농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농업정책협의체와 같은 상설 참여기구를 운영해 농정의 주체가 행정이 아닌 농업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40년 만의 재결합이 진정한 성공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광주의 도시 불빛만큼 전남의 들녘도 풍요로워야 한다. 첨단산업도시와 농업수도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농업을 지키는 일은 결코 과거를 볼드는 일이 아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오늘 농업을 살리는 것은 내일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이며, 오늘 농촌을 살리는 것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지키는 일이다.

새로운 특별시의 성공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새벽이슬을 맞으며 논과 밭을 지키는 농업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이 부러워하는 진정한 통합도시로 우뚝 설 것이다.

삶과 직결된다. 특히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고용관계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협상력이 항상 대등한 것은 아니다. 기업의 인력 운용 편의를 높이는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이나 고용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이 속도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특례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기존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세계적인 기업과 인재가 호남으로 오기를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결국 필요한 것은 규제를 풀 것이나, 지킬 것이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노동권을 함께 담아낼 정교한 설계다.

800조원은 계획의 규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 계획을 현실로 만드는 힘은 제도에서 나온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패도 투자액보다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노동자가 머물 수 있는 일자리를 얼마나 균형 있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설

도심 있는 BRT 노선 차질없이 추진되길

광주광역의 도심을 잇는 BRT(Bus Rapid Transit·간선급행버스체계) 3개 노선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가계획인 ‘제2차 BRT 종합계획(2026~2030)’에 광주지역 서·북구를 연결하고 도심 남북축을 잇는 ‘운암~각화 BRT’와 ‘효천~일곡 BRT’를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이 종합계획은 BRT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을 말한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BRT노선은 계속 사업중인 백운-매곡 BRT까지 포함해 3개로 늘게 됐다.

BRT는 급행버스가 주요간선도로를 빠르게 오갈 수 있도록 만든 대중교통 체계인데 버스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신호가 자동으로 바뀌어 버스가 정차하는 일 없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게 한 교통시스템이다.

여객 수송용량은 정전철의 85%수준인데 반해 사업비는 6.5%에 불과해 ‘저비용 고효율 대중교통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먼저 개발계획 고시를 마치고 하반기 기본·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간 백운-매곡 BRT 노선은 남구 백운동 옛 대동고에서 백운교차로~광천사거리~경신여고사거리를 경유해 북구 매곡동 광주공고에 이르는 8.67km 구간이다.

총사업비 452억6000만원이 투입되는 이 노선은 광천재개발, 신세계 백화점 확장, 더현대 광주 개점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되는 광천권역의 교통난 해소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또 신규 노선인 ‘운암~각화 BRT’는 북구 산동교부터 도동고개를 잇는 총연장 8.4km 구간으로 운암·두암·각화동 등 주요 주거 밀집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도심 내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한 것이다.

또 다른 신규 노선인 ‘효천-일곡 BRT’는 백운-매곡 BRT의 연장선으로, 효천지구~옛 대동고, 광주공고~일곡지구를 잇는 총연장 6.0km 구간이다. 이 노선은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광주 남부권의 교통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전망이다.

이들 노선이 구축·연계될 경우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역 대중교통 접근성의 획기적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들 노선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폐지수집 어르신 맞춤형대책 눈에 띄는 이유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있어 여름은 ‘고난’ 그 자체다. 낮은 폐지값과 하루 수입 부족 때문에 요즘같은 극한 폭염 속에서도 쉬지 못한 채 생계 노동을 이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폐지·고철류는 햇볕을 받으면 열을 오래 머금는 특성이 있어, 이들의 체감 더위는 더 높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무거운 짐을 옮기고 장시간 야외에 노출될 경우 몸의 회복 시간이 줄어들어 온열질환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 이들에게 폭염은 단순 더위가 아니라 중증 온열질환 유발하는 건강 위협요소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폐지수집을 강행하는 것은 열악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2024년 보건복지부 조사 기준, 이들은 전국에 1만4831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평균 연령은 78.1세로 평균 소득은 월 76만6000원으로 나타났다.즉, 취약한 생활여건상 폐지 수집이 하루 하루 연명하는 생계수단인 것이다.

이런 어르신들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 광주권 5개 자치구가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폐지수집 대체 일자리 사업으로 ‘자원재생활동단’을 운영기로 한 것이다.

이 사업은 이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내 또는 그늘에서 환경정화, 재활용품 선별·정리 작업 등을 하면 활동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동구·북구·광산구는 90명이 자원재생활동단에 참여해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활동하며 서구·남구는 7명이 1일부터 31일까지 일을 하게 된다. 특히 서구는 8월 한 달간 폐지 수집을 중단한 51명에게 고액 기부자 모임인 ‘서구아너스’의 후원으로 마련한 지원금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과 ‘천원국사’ 이용권 20장을 각각 지원했다.

이에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6월 지역 폐지 수집 어르신 600여명에게 냉감 소재 토시·스카프, 아이스 클레,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레 부착형 반사 테이프 등으로 구성된 ‘폭염 안전꾸러미’ 세트를 배부했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폭염 행동 요령 안내도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이 극한폭염에 활동을 멈춰도 생활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맞춤형 대책이 지속되길 바란다.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령인	차재진	사 장 정원민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정 치 부 370-7040	논 설 실 370-7200		
우편번호 61234			산업경제부 370-7020	임 원 실 370-7000		
대표전화 (062) 370-7000			사 회 부 370-7030	총 무 국 370-7093		
팩스 (062) 385-5400			문화체육부 370-7234	사 업 국 370-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편 집 부 370-7082	광 고 국 370-7070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